

“억대 부농 1만호, 농가소득 전국 3위 끌어올린다”

전남도, 2019년까지 15조 농업에 투자 ‘고소득 생명농업육성 5개년 계획’ 확정

전남도가 잇따른 FTA 체결과 인구 유출 등으로 시름에 잠긴 농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오는 2019년까지 5년간 15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농가소득을 전국 3위로 향상시키고, 억대 부농을 1만호까지 육성하는 것은 물론 귀농·귀촌가구 2만 가구를 유치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전남도는 19일 “농업경쟁력 강화, 농촌 정주여건 개선, 농업인의 의료·교육·복지분야를 포괄하는 ‘고소득 생명농업육성 5개년 계획

(2015~2019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미국, 유럽,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등 농산물 시장 개방 가속화, 고비용 저소득의 열악한 농업 생산 구조, 심화되는 농촌의 고령화, 공동화 현상 등 대내외적인 요소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소득 생명농업 시대 개막’을 위해 저비용·고소득 농업 구현, 매력 있는 농촌 정주여건 조성, 농업인 복지기반 확충 등 8개 분야, 31개 중과제, 131개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했

다. 먼저 2019년까지 고소득 품목 집중 육성, 다양한 농외소득 확충 등을 통해 농가소득 전국 3위(지난 2013년 6위), 농업소득 1위(3위), 억대부농 1만명(4065명)을 달성하기로 했다. 유기농 인증면적은 2014년 5000ha에서 1만2000ha로, 친환경농산물 프랜차이즈를 127개소로 늘리겠다는 의지도 포함됐다. ‘동물 복지형 녹색축산’을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축산물 가공유통망, 조사료 전문재배단지 등을 추가 설치하고, 향토산업 및 지역 전략식품산업 등과 연계한 고부가 식품소재산업 육성, 국가별 시장 특성 분석을 통한 수출 전략 품목을 발굴·육성하기로 했다. 이밖에 산림자

원 가치 증진, 정예 농업인력 육성, 농업인 복지기기반 및 매력 있는 정주여건 조성 등도 추진 과제다.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동지를 린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농업 관련 공공기관과도 소통·협력해 지역의 농업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근조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고소득 생명농업 계획이 농업·농촌에 새로운 희망과 도약의 등불이 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농업인과 농촌 공동체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끊임 없이 현장과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반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재경 광주전남향우회 신년하례회
“2015년 재경 광주전남향우회 신년하례회”가 19일 저녁 서울 강남구 호텔프리마에서 열렸다. 박준영 전 전남도지사, 윤장현 광주시장, 조희연 서울 시교육감, 김정열 재경 광주전남향우회장, 김광철 재경 광주전남향우회 명예회장, 이낙연 전남도지사,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권노갑 전 민주당 상임고문(왼쪽부터)이 담소를 나누고 있다. <전남도 재경>

서울·평양에 남북겨레문화원 동시 개설 추진

통일부 업무보고, 민생·환경·문화 ‘3대 통로’ 협의

통일부는 19일 연두 업무보고에서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민생·환경·문화 등 이른바 ‘3대 통로’ 개설을 비롯한 다양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북간에 ‘통로’라는 말은 지난해 10월 북한 고위급 3인방의 인천방문시 북한 황병서가 ‘오솔길을 대동로로 열어가자’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나왔다. 이어 북한의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올해에 자주통일의 대동로를 열어가자’고 한 뒤 북한의 올해 남북관계와 관련한 일종의 구호가 됐다. 북한의 이런 ‘대동로’ 주장에 우리 정부는 ‘3대 통로’를 언급한 것은 민생·환경·문화 등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관계를 강

화해 나아가 한다는 기존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일종의 ‘소통로’부터 먼저 강화하자는 입장으로도 보인다. 통일부는 이날 ‘3대 통로’ 중 우선 문화 분야에서 남북 주민간 동질성 강화를 위해 ‘남북겨레문화원(가칭)’을 서울과 평양에 동시 개설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남북겨레문화원은 각자 인원이 상주하면서 각종 문화제를 비롯한 민족공동유산 전시와 양측간 협의의 공간으로 쓰이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일단 양측의 수도에 서로의 인원이 상주하는데다가 대개 해당 국가의 문화원 설립은 양국관계 정상화와 수교 등과 연관된다

는 점에서 남북겨레문화원의 설립은 많은 함의를 가질 수 있는 대목이다. 민생·환경 분야에서는 복합농촌단지 조성 과 모자보건사업 확대, 산림협력 등 기존 ‘드레스덴 선언’에 포함된 제안들이 주로 담겼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민생 통로 개척에 있어서 북한의 시골 농촌 지역에 가보면 열악한 민생 인프라가 있는데 그것을 정비할 생각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3대 통로’ 얘기 외에 경제협력 분야에서는 서로 수혜를 입는 ‘호혜적 협력’을 원칙으로, 남북공동체 인프라 구축 추진까지도 언급했다. 이처럼 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남북교류협력 구상이 제시된 것과 관련, 최근 완화 조짐을 보여 온 5·24 조치의 유연화가 가속화되거나 정

부가 해제를 염두에 두고 본격적인 수순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인정이나 사과 등의 선(先)조치 없이 정부의 관련 행보가 가속화될 경우 적지 않은 논란도 예상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업무보고 사전 설명에서 “5·24 조치는 남북 간에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우선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5·24 문제를 포함해서 많은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경협이나 남북간 통일 인프라 구축 이런 것들이 우리뿐 아니라 북한에도 도움이 되고 나아가 통일에 대비해 남북이 하나씩 준비해나가는 차원에서 대화를 나누게 되면 북한이 수용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렇게 남북이 협의하고 합의하면 5·24와 관련해서도 좋은 해결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3월의 세금폭탄’ 공방 野 “재벌감세 탕” 與 “공동책임”

직장인의 ‘13월의 보너스’라는 연말정산 환급액이 ‘세금폭탄’이 됐다. 비관과 관련, 여야가 19일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이번 논란이 세법 개정을 기초로 한 만큼 여야의 공동책임이라는 논리를 펼 반면, 야당은 ‘재벌 감세’라는 현 정부 정책의 실패로 원인을 몰았다. 또 여당은 연소득 7000만원을 넘어서는 고소득자의 세부담 증가가 중산층 이하 계층의 ‘세금폭탄’으로 오도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야당은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야당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세법을 여당 공격용으로 삼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강석훈 정책위 부의장은 “야당이 말하는 어떤 공제율을 적용하더라도 세수가 늘어나는 계층은 중산층(연소득 7000만원 이상)”이라며 “연말정산 공제를 늘리자는 야당의 주장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되는 중산층의 세금을 깎아 주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문화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들어올 곳은 없는데 나갈 곳은 많아 정초부터 ‘유리봉급’ 생활자의 웃음이 사라졌다”며 “정부가 봉급생활자의 지갑을 털어 재벌감세로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 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석현 비대위원은 “연말정산 세법개정안은 2013년 정부가 제안하고 여당이 밀어붙인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안종범 당시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앞장선 것”이라고 정부·여당 책임론을 폈다. 다만 우윤근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밀어붙이기’를 막는 데 실패한 저희도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며 “세액공제를 유지하되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5%p 정도 상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시교통문화연수원장 5명 응모 22일 이사회서 후보 결정

광주시가 공모한 광주시교통문화연수원장에 전직 시의원 등 5명이 응모했다. 19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오주 원장의 사임으로 공석인 교통문화연수원장 공모를 한 결과 전직 시의원 2명, 전직 교통안전공단 간부, 사설운전면허시험장 운영자 등이 접수했다. 교수와 공무원, 시민단체 등 6명으로 구성된 원장추천위원회는 20일 면접을 한 뒤 2명을 이사회에 추천할 계획이다. 이사회는 22일 열릴 예정이며 이사장(행정부시장)이 원장 후보를 제청하고 이사회에서 동의 절차를 밟는다. 이후 윤장현 광주시장의 승인을 받아 최종 원장에 취임하게 된다. 교통문화연수원장을 포함 모두 11명인 이사회는 시 행정부시장과 교통건설국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며 나머지는 택시, 버스, 화물조합 등 교통관련 단체 관계자로 구성됐다. 원장 임기는 3년이며, 연봉은 지난해 말 기준 9300만원이다. 광주시는 다만 교통문화연수원이 출자·출연기관에 속하지 않는 만큼 시의회에 원장임용을 위한 추천위원을 의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교통문화연수원에 운영비와 인건비 등으로 연간 6억~8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교통문화연수원은 택시와 버스 등 교통 관련 종사자 취업 전후 교육을 맡고 있는 법적 기관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서양새마을금고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